

환경경영

(1)

한상욱 * 이병욱

(이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 동연구원 해외연구원)

목 차

- 1. 환경논의의 전개
 - 1.1 역사적 배경
 - 1.2 국제적 환경논의
 - 1.3 국내환경동향
- 2. 환경경영의 체계
 - 2.1 환경과 경영의 접목
 - 2.2 환경경영시스템
 - 2.3 환경경영의 주요과제
 - 2.3.1 TQM과 환경경영
 - 2.3.2 Life Cycle Analysis
 - 2.3.3 Clean technology
- 3. 환경경영의 실천적 전개
 - 3.1 환경경영 동향과 전망
 - 3.2 외국기업의 사례
 - 3.3 국내기업의 사례
- 4. 결어
- 5. 참고문헌

1.1 역사적 배경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 오염의 문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심화되어 왔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생산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켰고, 최근에는 그 피해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 이른바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지구가 언제까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를 부양하기 위한 산업활동 등 경제활동의 급격한 팽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범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온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팽창은 인류복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과 수질, 대기 토양의 오염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은 경제개발이 지상과제로 인식되어온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범세계적 공감대 아래 인류복지의 향상이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 왔으며, 그 이면에 잠재해 있던 환경에 대한 우려는 거의 표출되어지지 못해 왔거나,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반사회적 시각으로 여겨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소득수준의 증대와 다양한 삶의 질적 향상을 우선적으로 향유하게 된 서구 선진산업국가들이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대량 생산 체제하의 공업화과정의 초래할 지 모르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된 유래는 1960년대 초 당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농약이 인류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Carson, 1965). 이러한 문제 인식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류환경에 관한 UN회의"와 같은 해 로마클럽에 의해 발간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Meadows et al, 1972). 1973년 및 1978년에 일어난 에너지위기 즉, 석유파동은 천연자원의 절약 및 자원절약형 산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실제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대응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긴 바 있고(예, 자동차 경량화, 석유원료의 대체 등), 선진산업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환경 및 자원관련 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1980년 세계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합이 “지구의 날(Earth Day)”을 처음으로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1980년대 중반 부터는 보팔사고¹⁾와 엑손 발데즈호 사고²⁾ 등 대규모 환경재해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의 파괴에 따른 인류의 미래가 심각하리 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위기의식은 최근 과학자들이 각종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 냄에 따라 점차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범지구적 환경문제는,

-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 둘째, 오존층파괴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과 피부암 등의 문제.

셋째, 생물종다양성의 감소문제 등이다.

이외에도 열대림감소, 사막화, 해양 및 하천오염 등 수많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와 대책이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정상회담(Rio Summit)”에서 구체화 되었으며, 이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환경문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다룸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의 후속적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2 국제적 환경논의

●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의 확대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이미 1950년대 부터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등으로 시작되었으며,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한 “리우환경선언”과 “Agenda 21”을 계기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방향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을 통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연료사용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생물종다양성협약」 및 「산림보전원칙」에 150여개국 이 서명하였다. 현재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상기한 것 외에도 오존층보호를 위해 CFC의 사용을 규제한 몬트리올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등 모두 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협약들은 미

가입국 또는 가입국중 의무불이행국에 대해 무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FC, 통칭 프레온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우리의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은 가입국의 화석연료(즉, 석탄과 석유 및 가스)의 사용량 감축을 의무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에너지 과다소비국으로 에너지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체 산업활동에 엄청난 과금영향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바젤협약」에 의해 폐지, 고철, 폐고무, 스크랩 등 일부 재생원자재의 국제거래가 제약받게 되어 원자재 수급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며, 「생물다양성협약」과 「산림보전원칙」에 의한 생물자원과 임업에 대한 규제관리는 우리나라의 목재, 가구, 제지, 화학, 건설, 의약품, 생명공학 등의 관련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OECD 및 EU의 환경보호대책 강화

OECD는 '91년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였고,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을 조화시키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 이 지침에는 무역과 환경정책수립의 기본원칙, 무역규제방법 및 그 대상, 환경기준의 국제적 조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EU는 공동 차원의 에너지·탄소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마크제도를 확대하고,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및 농약사용의 규제 등 환경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환경정책은 기후변화, 대기·수질·토양오염의 방지 및 보건·안전 등에 역점을 두고 EU 차원의 통합적인 환경보전체계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앞으로 EU의 환경대책은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95.1.1부터 비교적 환경수준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자유무역지대(EFTA) 회원국의 EU 가입이 실현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EU의 환경기준이 점차 엄격해질 것이고, 역외 국가들의 대 EU 수출여건은 경색되는 것은 물론 현지 투자여건도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WTO의 출범과 환경과 무역의 연계

GATT에 의한 세계적 무역개방의 대세속에서도 환

경문제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오히려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UR협상이 본질적으로 무역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표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의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으나, WTO의 발족과 더불어 환경문제해결을 무역과 연계시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 이른바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충격보다도 더 큰 파급영향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그린라운드의 환경논의는 리우 환경회의에서와는 달리 추상적이고 가치관적인 선언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 규제수단을 동원하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규제 대상도 개별국가의 환경정책수단과 환경실태, 제품의 환경유해성은 물론 기업의 환경관리 방식 또는 제조공정에서의 환경문제까지를 포괄하게 될 것이며, 규제 수단도 오염자 부담 원칙의 구체화, 공해공정에 의한 제품의 수입금지, 느슨한 환경규제하에서 저렴하게 제조된 상품에의 상계관세 부과 등 강력한 수단이 채택될 전망이다. 또한 그린 라운드를 주도할 WTO에서는 GATT에서와는 달리 강제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방식도 중전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전환함에 따라 협상기간이 우루과이라운드 보다 크게 단축될 것이며 선진국에 의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ISO의 활동과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

한편,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도 1991년에 산하기구로 「환경자문그룹」(SAGE : 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을 설치하여 환경부문의 국제적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던 차에 1992년 리우 환경회의 당시 주요국 표준화기관의 요청에 따라 1993년 6월에 기술위원회 207³⁾(TC 207 : Technology Committee 207)로 확대 발족시키고, 현재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규격들을 통일하여 향후 상품과 용역의 거래시에 국제적 표준 인증인 ISO 14000 시리즈를 1996년 부터 발급할 계획으로 있다. ISO 14000시리즈⁴⁾는 여타의 국제 환경규제와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반에 걸쳐 환경실태를 평가하여 표준화된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대상 영역은 환경경영체계, 환경심사, 환경성과평가, 환경라벨링 등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계에는 매우 생소한 개념으로 기업이 단순히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얼마나 우수한 환경방침, 환경정책, 환경관리조직,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경영의 환경분야에 관한 국가별 표준규격을 정해 놓고 있는 바, ISO에 의한 국제적 통일규격의 적용과 무역거래에서의 필수화는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ISO 품질인증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상기한 그린 라운드, 국제환경협약, 선진국 환경규제, ISO 환경인증제도 등이 상호 결부될 때에 우리나라의 법률적 환경규제 기준도 국제수준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공업진흥청에서는 늦게나마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여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에 대한 지도, 홍보를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의 적응력 상실로 도태될 것이지만, 조기에 적극적으로 사전대응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개념 또한 우리의 기업계로서는 생각해 보지 못한 생소한 것이지만, 미국은 1986년의 입법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이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해마다 정부에 신고하며 정부는 이를 시민과 언론에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1993년 6월에 공포하여 1995년에 발효될 「기업환경경영 및 감사제도」(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는 기업이 외부 전문기관의 환경감사를 거친 후에 관련된 모든 환경관리 정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에 이러한 환경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앞으로 환경관련정보 공개의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의 "알 권리(Right-to-know)"를 보장한다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며 정보공개에 따라 환경에 소홀한 기업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선진각국의 환경보호단체나 소비자단체

들이 환경배려를 등한시하는 기업의 상품에 대한 불매/배격운동을 보다 더 활발히 전개하게 될 것이다.

1.3 국내환경동향

우리나라는 1960년 초를 기점으로 하여 공업위주의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가져와 62년 대비 92년의 1인당 GNP는 82배, 전력소비량은 78배, 자동차수는 180배로 늘어난 반면, 환경은 건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추세로 진전되었다.

대기질은 유황함량이 높은 연탄, 벙커C유의 소비증가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증가로 대도시와 공단 주변은 환경기준의 초과가 일상화되었다. 수질의 경우 오염요인이 되는 생활하수가 년 7%, 산업폐수가 년 20% 씩 증가하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 시설이 크게 부족(92년 처리구역 인구 37%)하며 상수원의 60% 정도가 2급수를 밀고 있다. 특히 도시 및 공단주변과 항만 및 도시·공단 연안의 수질은 산업용수로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폐기물의 경우 산업활동과 소비활동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부족과 감량화, 자원화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부적정처리로 토양은 물론 하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산업폐기물의 공장내 적체는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경우 늘어나는 개발수요에 따라 농지와 산지가 감소하고 있고, 연안매립의 증가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가중으로 인해 멸종위기와 감소 추세에 있는 야생동식물종은 현재 약 180여종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중화학공업의 성장 ② 공업단지의 조성, 발전설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③ 자동차의 급증 ④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 ⑤ 국민의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리조트 산업의 확대 등, 문제의 잠재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어 환경대책이 획기적으로 강구되지 않는 한 문제는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회고하여 보면 70년대 후반까지는 일부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 학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을 뿐 국가 전체적으로

그린라운드의 환경논의는 리우 환경회의에서와는 달리 추상적이고 가치관적인 선언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 규제수단을 동원하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린 라운드를 주도할 WTO에서는 GATT에서와는 달리 강제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전환함에 따라 협상기간이 우루과이라운드 보다 크게 단축될 것이며 선진국에 의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보아 거의 방치된 상태였으며, 80년대에 들어와 환경정책이 태동하고 헌법에 환경권조항의 삽입과 관련정책 및 제도정비와 함께 각종 대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미흡하여 대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90년대에 들어와 환경문제의 사회문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어 국가전체적으로 대응하여야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사회적 여건 및 경제개발과 맞물려 발전되어 왔다. 이를 년대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실업과 빈곤으로 부터의 탈피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을 수립하였고,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공장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야기될 공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63년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내에서 공해물질 배출공장을 신고토록 하였다. 이를 다룰 기구로서 ’67년 보건사회부내 보건국 환경위생과 공해계를 두었으나 공업화위주의 성장정책이 국가정책상 상위에 있었고, 이를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해는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그나마 제정된 법의 집행이 형식에 불과하였던 환경정책부재의 시기로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소위 공해라고 하는 전형적인 것에서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강하 등 지구환경문제로 파급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의 강화와 환경관리 규정의 세계적 통일화 및 무역거래와의 연계 등으로 이어져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활동은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함께 원자재의 수입에 의한 상품의 가공수출에 주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대도시, 공단, 배후도시의 가정하수 및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확대되었다. 정부는 공해방지법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총량규제, 환경기준설정, 자동차배출가스규제, 농경지오염방지비용부담, 방지시설등록,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법을 77년 제정하였고, 보건사회부 위생관리관실내 공해담당관, 위생국공해과, 환경위생국 공해관리관, 환경관리관실 등으로 공해방지를 위한 관련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이 여전히 국가정책상 최우선에 자리했고,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이 수출상품의 원가상승요인이 됨은 물론 환경문제가 북한의 대남 비방활동에 쓰여지는 상황이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거론조차 금기시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일 수 밖에 없었고 기업도 환경투자비용을 과외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1980년대

3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은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

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사회부문을 통합하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82-86)으로 전환되었고 성장과 환경의 조화개념이 대두되고 중앙환경행정 전담기구로 정부는 '80년 환경청을 신설하고, 81년 6개 소의 지방환경청정관리사무소, 84년 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임시기구), 86년 두 기구를 합친 6개 지방환경청의 설치 등 기구의 확장파 함께 제도적 법적 조치로서 '81년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기관의 확대, 배출부과금부담제, 생활소음규제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법을 개정,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제정, 86년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84-2001)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재정적인 취약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현지집행성이 강한 업무(환경시설의 설치허가, 단속, 처분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86년 민주화선언과 함께 민간 환경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1990년대의 모습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성장위주의 강력한 산업정책에 가리워져 소홀히 다루어졌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부는 90년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면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그해를 “환경보전원년”으로 선언하고, 정부 각 부처의 환경보전을 위한 중기종합계획 및 정부, 기업, 국민의 환경보전지침이 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의 선언을 비롯하여 법령, 제도의 정비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1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⁵⁾이 수립되므로써 각종 계획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추진되게 되었으며, '92년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문을 채택하고, 잇달아 자연환경보전 10개년 계획, 국가폐기물종합계획, 자원재활용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련법령에 있어서는 '90년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을 위시한 14개의 개별법으로 분리·정비되었으며,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하여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년중 발생하는 수질오염문제와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필요성 대두와 함께 '94년에는 건설부 상하수도국, 보사부 음용수관리과, 국립보건원 수질검사과를 환경처로 이관하였으며, 4대강 환경관리체제로 지방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사후처리중심의 행정, 총괄조정능력의 미흡,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부실 등 환경문제에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므로써 환경행정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지방화, 자율화에 부응하는 시책 역시 가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배출시설 점검업무와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하겠다. 94년에는 환경처를 집행적 기능의 성격이 강조되는 부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관행 및 제도의 변화가 없는 한 이는 간판만 바꾸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종합조정기능이 강조되는 환경행정의 성격으로 보아 퇴보라는 시각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소위 공해라고 하는 전형적인 것에서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강하 등 지구환경문제로 과급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의 강화와 환경관리 규정의 세계적 통일화 및 무역거래와의 연계 등으로 이어져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활동은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를 국정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표 1 환경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대표적인 국가들	특	성
제 1 그룹 덴마크,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	충분하게 명료한 규정 시스템, 높은 공공 기대, 대부분 완전히 발전된 환경 기간산업들을 갖는 환경 선도 그룹	
제 2 그룹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전지구적 환경 청지기정신 이슈로 급속히 변화하거나 참여하기 시작한 그룹	
제 3 그룹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타이완	아직까지 환경 이슈가 약하게 관리되지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룹	
제 4 그룹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페루, 인디아, 인도네시아, 파나마, 폴란드, 러시아, 타일랜드	고려할 만한 산업 능력과 환경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요구와 기대가 초보단계에 있는 그룹	

(자료 : Prism first Quater, Arthur D. Little, 1994)

음미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환경정책과 기업경영의 방향을 재정립하므로써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시 우리의 위치는 중하위 수준이며, 중상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기업경영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 1) 1984년 인도의 보팔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농약공장 유독물 누출사고로 약 1,400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 2) 1989년 알래스카 근해에서 세계제일의 석유회사인 미국의 Exxon사 소속 유조선 Valdez호에 의한 원유유출 해양오염사고로, 이를 계기로 모든 기업활동과 환경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발데즈원칙(The Valdez Principles)이 제정되었음.
- 3) ISO는 '91년 국제전기표준회의(ICE: International Committee of Electricity)와 공동으로 '환경전략자문그룹(SAGE: 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을 구성하여 환경에 관한 표준화체제를 검토하였고, '93년 2월 SAGE의 제안에 따라 환경기술위원회(TC207)가 설립되었다. '93년 6월 제1차 기술위원회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어 주제별로 6개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고, 동년 10월 각 분과위원회(SC: sub committee)의 실무작업반(WG: workin group)이 구성되어 환경관리시스템(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감사(EA: Environmental Auditing), 환경성능평가(EPE: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환경마크(EL: Environmental Labeling), 용어 및 정의(T & D: Terms & Definition), 제품환경표준(EAPS: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등 7개 주제에 관한 표준화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 4) '94년 5월 호주에서 개최된 ISO TC207 제2차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환경표준을 'ISO 14000'으로 명명하였다.
- 5) 지속적인 경제사회개발로 환경오염은 가속화추세인데 반해 폐적인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90년 환경처 설립과 함께 법정부처 차원에서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중기종합계획('91-'95)을 수립하였다. 이는 환경관련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종합조정방향과 지침으로 매년 추진실적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와 유사한 외국의 계획으로는 미국의 '공통의 유산-미국의 환경전략('90)', 일본의 '환경보전장기구상('85-)', 오스트리아의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92-)', 네덜란드의 '국가환경정책계획('89-2010)', 캐나다의 'Green Plan('90-'94)', 프랑스의 '국가환경계획('91-2000)', 유럽공동체의 '제5차 환경행동계획-지속가능성을 향하여('93-2000)' 등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